

## 데스크 시각

## ‘편견의 그늘’에 갇힌 지적장애인들

김 일 환  
여론매체부장·편집부국장

광주지역 지적장애인은 대략 6500여 명 정도. 하지만 이는 조사된 수치일 뿐 드러나지 않는 지적장애인은 그 두 배가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21세기 최첨단시대에 이런 터무니없는 통계가 또 어디에 있을까마는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내 가족 중에 지적장애인이 있다 해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아직도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의 정서를 자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잘못된 편견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지적장애인이라는 명칭조차 정확히 알고 쓰는지 의문이다. 지적장애인은 한 때 ‘정신박약아’, ‘정신지체아’라 불리었다. 하지만 이

호칭들이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호칭이라 하여 수년 전에 바뀌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지적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또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그 장애를 안고 살게 된다는 것도 편견이자 오해이다. 소수의 중증장애를 가진 이외에는 교육과 훈련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는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최근 KBS 드라마 ‘굿닥터’는 자폐증(지적장애인의 범주에 자폐증도 포함)을 않는 레지던트가 소아외과 서전(수술의)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드라마라고는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 자기권리찾기 사회적 관심을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지적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편견이다. 집안에 닥친 알리고 싶지 않은 불행으로 치부하고 꽁꽁 감춰버린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지적장애인의 인격권이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적장애인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없다 하여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욕구와 인격이 없다고 예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도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다. 단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면서 지적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돋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미 광주지역에는 광주 지적장애인 복지협회를 중심으로 서구, 북구, 광산 구지회가 활동하고 있고 협회 신하에 주간 보호센터와 각각 각종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긴급 지원 솔루션위원회 등이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자립 지원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 찾기를 돋는 일이다.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 수 없는 그들을 위해 복지활동가들이 나서 그들이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확보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아직은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그 활동 또한 벅겁지만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지적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이 있기에 희망의 불씨를 살릴수 있고, 어엿한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날마다 편견과 맞서 싸우는 지적장애인들의 진정한 친구, 이 지역 활동가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모인다. 2년마다 열리는 지적장애인들의 큰 잔치인 아시아지적장애인복지대회(Conference of the Asian Federation on Intellectual Disabilities)가 그것이다.

##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 인도 개최

6일부터 13일까지 인도 뉴델리 해비타트 센터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아시아 15개 회원국 1500여 명이 참석, 지적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균등한 권리보장을 촉구하게 된다. 또 6일 워크숍을 열어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나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광주지역에서도 연대 최대 인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지적장애인 대표와 활동가 등 30여 명이 한국대표로 가게 된다. 지역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당당하게 지적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길 바란다.

그동안 쌓아온 지적장애인 권리활동의 성공사례와 지원 솔루션 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고,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날마다 편견과 맞서 싸우는 지적장애인들의 진정한 친구, 이 지역 활동가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은펜칼럼

## ‘일베’의 연관검색어, 국정원

이병우  
광주대학교 자율융복합전공학부 교수

한때 방학 중엔 인터넷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었다. 방학기간엔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고 그만큼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안하무인격으로 공격하던 주인공이 알고 봤더니 초등학생이었다는 경험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싸움이더라도 벌어지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너 조딩이지?’였다. 주로 무개념으로 비속어를 남발하는 상대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다.

인터넷이 공론장 역할을 하여 새로운 여론을 주도하기도 했지만 상대를 저급하게 공격하는 악플러에 의한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 테러 수준의 댓글 공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는가. 댓글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공방전은 정보사회에 어두운 단면이다.

몇 전부터 유독 호남 비하 글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의구심을 가졌다. 지역 감정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였기 때문이었다. 지역갈등과 이념문제가 겹치고 얹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글들이 인터넷상에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을 비롯한 일부층의 일탈된 행동인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읊지임에 국기기관이 관련돼 있었다. ‘국정원 댓글녀’ 사건 이후, 관련 속보를 접할수록 놀라

움은 배가된다. 악성 댓글로 여론을 흐도하는 일을 국가기관이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최근 검색 사이트에 ‘일베’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로 ‘국정원’이 자동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묶여 있다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정원이 일베와 관련해서 암암히 어떤 일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좌의효수’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좌의효수’는 2011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11월 28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3000여 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흥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아파 전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파” 등 호남, 여성 비하글과 특정 인의 공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글을 작성한 자가 일베층인 것으로 생각했지 국정원 직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좌의효수’가 검찰에 고발되자 국정원 직

원이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국정원이 검찰 조사결과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지자 개인적인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녀’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으나 수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은 인터넷상의 종북주의자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해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가공무원이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해온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악성 댓글로 특정 지역을 비하하다니,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인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기고

## 대한민국 노인들이여, 자신의 위치를 찾읍시다

양성관  
동강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2일은 제17회 ‘노인의 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인구의 고령화로 지구촌 여러 나라에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 UN총회에서는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각 나라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노인문제에 관한 의식제고와 노인복지서비스 개발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김영삼 정부 후반인 1997년부터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의 보호는 가족이 담당해 왔다. 산업화 과정과 생활수준의 향상

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학가족화로 인한 노인보호 대책이라는 시대적 요점에 부응하기 위해 1981년 6월 5일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현대사회에 들어 의학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 등으로 인해 노인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능력이 있는 15세~64세 인구의 비율과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05년에는 1:8, 2020년에는 그 절반인 1:4가 되고 2050년에는 1:1이 될 전망이다. 즉 2050년에는 생활능력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현상이 온다는 것이다. 노인의 수가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이나 버스에 절반의 경로석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노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노인은 어떠한 존재로 부각되는가?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노인 수명의 연장이 재양인가 축복인

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은 분명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 자리와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은 자기계발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에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의 의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은 크게 ‘자아계발 프로그램’과 ‘취미오락 프로그램’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노인들의 ‘자아계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들은 노후를 즐기기보다는 자신들이 젊었을 때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거나 젊었을 때 배운 내용을 재능기부형식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보람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고,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한문이나 서예, 외국어 등을 지도할 수 있으며, 구수한 언변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들이 배운 악기나 장끼를 가지고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봉사할 수도 있다. 아니 해야 한다. 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궁무진하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러한 역할을 노인들이 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노인들이 올바른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노인복지정책을 올바로 평가 못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지적할 줄 알고, 노인

들을 위한 의식 있는 소리를 내야 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노인들은 어떠한 입장인가? 다른 노인들은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여론을 주도해야 하며, 분명히 그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노인을 무섭게 알고,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갈 것이다.

대한민국 노인들이여, 매일매일 자기계발에 힘쓰며 분명한 노인의 목소리를 낱시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잘 살펴보다가 언제 만든 제품인지 알기 위해 제조 날짜를 물었더니 대리점 직원이 여기 적혀있지 않느냐며 가르켜졌다. 거기에는 ‘\* \* \* A00172 \*’라고 쓰여 있다.

일부러 암호처럼 어렵게 써놔서 농민들

을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

란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기계는 친자식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값도 아주 비싸므로 농민들은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닌데 그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제조 날짜를 이렇게 어렵게 표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농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써주기를 기대한다. 더군다나 바퀴는 사람의 발과도 같은 것 아닌가. 잘 구르던 농기계가 바퀴가 문제가 생겨서 뒤집히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그렇다.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이런 부분에도 좀더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

▲이기현·광주시 복용봉동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社說

## 정부, 보육예산마저 지방 떠넘기기인가

교육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 운영을 위해 국고 예산 1조6000억 원을 요구 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전국 시·도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사업을 지역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데다 광주·전남의 경우 올해보다 850여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이를 총당할 뾰족한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교육부 관할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다닌 3~5세를 대상으로 국민 공통 교육·보육과 정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 이를 통해 금년에 광주·전남에서는 7만5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광주 708억 원, 전남 826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누리과정의 재정 부담이 비용 증가로 광주시교육청은 1180억 원, 전남도교육청은 12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지만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의 국고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재정 교부금이 정부사업에 빠져나가게 되면 내년도 학교 설립과 시설 개선사업 등은 후순위로 밀려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전남은 자체체나 교육재정이 전국의 최하위로, 거덜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정부는 당장 누리과정을 비롯한 보육 사업의 지방 떠넘기기를 중단해야 한다. 사회복지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교부금은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지방 없는 정부란 있을 수 없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0대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두른 혐의(범죄단체 구성·활동 등)로 S과 소속 이모(32)씨 등 21명을 입건했다. 또한 자신을 폭력조직원이라고 알려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고 10대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흥모(19)군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말부터 인터넷 및 짱카페, 고교 씨름·야구선수 출신 청소년들을 영입,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당한 조직원을 위해 보복 폭행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왔다고 한다. 또 세 과시를 위해 단합대회를 열고 단체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조직폭력과 학교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칫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위중한 병의 수로 청소년 단순·명쾌화해야 한다. 당시 말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 無等鼓

타난다’고 믿은 중세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1379년 프랑스에서는 돼지 사육자의 아들이 돼지에게 살해될 때 ‘말리지 않 았다’는 이유로 한 지역의 모든 가축들을 처형하여 했던 일도 있었다. 처형